평화정착과 인권의식 개화를 위한 전제조건

민간인학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상규명 통해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김영범 |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전쟁사를 다룬 공식기록들은 적대자의 도발과 참상만을 고발하고 비난해 왔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사관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역사적 진실의 요체가 드러난다. 전쟁참여자 모두 조직적인 양민학살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반세기 전에 일어난 비극의 진실을 규명할 책무가 놓여 있다. 이 역사적 과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정착하고 인권의식이 개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작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대량학살의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 보스니아에서, 동티모르에서, 체첸에서, 르완다에서 수천 수만명씩 사람들이 떼죽음당했다. 그 참극을 우리는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볼 수는 없었다. 바로 이 땅에서도 근래 수십년 사이에 그와 똑같은 유형의 참극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만 하더라도 수십만으로 추산되는 인명이 동족과 외국 군대가 저지른 학살행위의 제물이 된 바 있다.

소설가 박완서씨는 한국전쟁 체험을 담은 자전소설의 제목을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강력한 의구심의 언사로 표현했다. 전쟁의 참상과 그것이 일으킨 모든 혼돈의 기억을 더없이 함축적으로 표현한 어구가 아니겠는가. 아마도 그 제목은 "우리가 정말 그랬던가?"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나 있었을까?"라는 뜻을 담은 것이 아닌가 싶다. 증언과 기록들로 드문드문 전해지는 학살의 실상과 양태들이 소름끼칠 만큼 끔찍했다는 데서 그런 느낌은 더욱 강하게 든다.

한국전쟁이 한반도의 주민에게 안겨준 상처와 후유증은 너무나 깊고도 컸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치유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너무도 미미했다. 그 환부에 메스를 대보는 일조차 쉽지가 않은 삶의 틀 속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을 보내왔다. 그러는 동안 전쟁사의 공식기록들에서는 적대자의 도발과 참살행위만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식으로 일방적인 단죄만 거듭돼 왔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사관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 보면, 그래서 실사구시의 정신에 충실해 보면, 역사적 진실의 요체는 너무도 명명백백히 우리 앞에 드러나고 만다. 좌·우익, 남·북한, 그 어느 쪽도 학살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국군과 경찰, 그 보조원, 반공-우익단체원들, 그리고 인민군과 빨치산부대 및 지방 좌익 동조자들이 모두 조직적 학살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조직적 학살범죄 명백히 밝혀야

이런 사실을 마냥 감추고 덮어두려고만 하는 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우행(愚行)과 다름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냉정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인 뒤라야만 진실의 역사를 써내고 전승시킬 수가 있다. 수치와 오욕의 역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문제삼고 공론화해야만 그것을 올바로 청산할 길도 열린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일단 피해자의 관점과 인권중심 사관이 요청된다.

그런 견지에서 '자유의 십자군'을 자임했던 미군도 참전 초기부터 의도적이고도 조직적인 학살의 공동정범이 돼 간 점을 정면으로 문제삼아야 한다. 피난민 대열에 불시의 총격과 포격을 가하고, 피난민 야영지와 민가에 무차별 폭격과 기총소사 세례를 퍼부은 일들이 그것이다. '흰옷'만 보면 반사적으로 '적=인민군'을 연상하면서 학살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갑작스런 전선투입에 따른 심리적 공황과 함께, '웍스'(wogs) '국스'(gooks)로 일컫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뿌리깊은 인종주의적 편견과 경멸감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행위의 진정한 배후는 '제노사이드'(말의 본뜻에서 '종족살육')를 감행하고서라도 반드시 승전해야만 한다는 미군 수뇌부의 강박증적 집념, 또는 다른 어떤 유의 전략적 고려였을지도 모른다.

하기는 20세기 초부터 우리 민족은 일제 침략세력과 군국파시즘 추종자들이 거침없이 자행한 대량학살의 희생자가 된 바 있다. 그리고 해방 후의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에도 새 지배자를 보위하는 군사폭력의 무도한 학살행위가 강도와 빈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전쟁 때도 발발 직후부터 군경에 의한 학살극이 재연되기 시작하더니 곧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된 것이다.

개전 직후에는 '좌익관련(혐의)자'로 분류된 국민보도연맹원과 정치범 및 일반 재소자 일부가 정부 고위층의 지령과 재가에 의해 조직적인 명령계선을 따라 불법으로 대량학살됐다. 전시상황을 빙자해 헌법정신을 짓밟으며 마구잡이 살육을 자행한 데서 국가는 스스로 정당성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초법적 국가테러리즘의 길로 치달았던 것이다. 뒤이어 임시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의 치안 확보와 산악지대의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는 막연한 의심이나 평소의

사감 또는 즉흥적 판단에 따라 '빨갱이' '통비분자'로 몰린 양민들이 무수히 학살됐다.

혐의와 개연성만으로 '정치적 학살' 일어나

인민군 치하와 그 퇴각시에는 약 12만9천명의 우익인사와 군경가족·공무원 등이 '반동분자'로 지목된 끝에 '숙청' 당하거나 무단학살됐고, 그 뒤끝에는 수복지구에서 우익집단의 보복학살이 기승을 부렸다.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빨치산 부대들도 토벌군이 그랬던 것처럼 '비협조적' 주민 다수를 학살하곤 했다. 그런가 하면 파죽지세로 북진해 간 미군도 북한 땅 도처에서 17만여 명의 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북한 당국은 주장해 왔다.

한국전쟁의 희생양이 된 민간인들은 거개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찬반의사가 분명치 않은 지극히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무단불법으로 학살된 이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불명예의 낙인을 제거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 사진은 국립현충원.

그 결과, 계곡과 하천변, 동굴과 폐광산, 철로와 교량, 수풀과 과수원, 언덕과 들판, 낭떠러지와 고갯마루, 갯벌과 연안 바다에 이르기까지, '금수강산'의 모든 산야와 하해가 학살의 붉은 피로 물들었다. 노근리, 괴개굴, 골령골, 가창댐, 왜관교, 금정굴, 익산역, 석달마을, 외공리, 동창교, 신원면, 초막마을, 섯알오름, 강화 갑곶, 신천…. 통한의 기억이 서린 참극의 기호들이 방방곡곡에 수없이 널려 있게 됐다.

피학살자들 가운데는 남북 정권 어느 일방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차없는 죽음의 굴레가 덮씌워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런 찬반의 의사조차도 분명치가 않은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었다. 그들은 선호하는 정치적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언표하거나 정치적 행동으로 드러내는 일은 삼가는 편에 속했다. 그것이 난세의 생존지혜임을 감득하고 있는 것이 죄라면 죄였을 뿐이다.

문제는 그들이 "밤에는 무장대-빨치산 세상, 낮에는 군경의 세상" 또는 "어제는 인민군 치하, 오늘은 국군 치하"로 전변하는 불확실성의 전황 속에서도 늘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선택과 의사 표명을 강요받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태도를 표명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언제 어디서 다른 쪽의 보복성 응징이 덮쳐올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도 명백히 '이쪽' 편이라고 확인 또는 판정되지 않을 때, 성급한 폭력수단 전유자들은 손쉽게 그들을 '저쪽' 편으로 간주하고는 이윽고 절멸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그로부터 무고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 잇따르게 됐으니, 혐의와 개연성만으로 '정치적 학살'의 제물로 삼은 것이다. 이분법적 흑백논리의 족쇄 속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은 민간인들이 종국에 입게 된 희생과 피해의 극단이 죽음이고 집단학살이었다. '양민학살'이란 규정은 그렇게 해서 성립 가능해진다.

어떻든 학살 명령자와 집행자들의 심성은 일제하 군국파시즘 체제 속에서 주입되기 시작한 총화주의·폭력물신주의·청산주의적 사고로 충만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정신과 기질을 이승만과 극우세력은 '멸공' '타공'의 명분을 내세워 적절히 이용했고, 좌익은 좌익대로 그에 질세라 '반동분자 박멸'을 고창했다. 그래서 좌우익 양편의 절멸주의 논리가 양성한 적대와 증오의 정치심리가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마치 짐승사냥 하듯 동족학살이 자행된 것이다.

"과거사의 '반면교훈비' 세우자"

학살행위는 학살자 자신의 인간성도 마멸시켰고, 마침내는 학살자까지도 희생물이 되는 결과를 빚었다. 학살의 하수인들은 여생 내내 어두운 기억에 시달려야 했고, 그것은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심각한 정신장애 증후군까지 낳았다. 결국, 학살을 지령하고 교사한 자들만이 이득을 봤을 뿐, 그 그늘에서 국민 모두가 피해자로 남게 된 것이었다. 학살의 죄업을 똑똑히 인식하고 올바로 청산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반세기 전의 동족상잔 전쟁이 낳은 민간인학살의 비극에 관한 진실 규명의 책무가 있다. 시민사회도 국가도 그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관심과 무지와 가장된 무표정의 늪에서 걸어나와 냉전사와 학살사의 청산 도정에 같이 합류해야 한다. 무단불법으로 학살된 이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불명예의 낙인이 찍혀 있다면 제거해 줘야 한다. 학살을 명령하고 사주한 자, 지휘한 자, 적극 실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와 한도에서라도 역사적 책임이나마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혹시 불화와 갈등을 낳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화해와 통합으로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남북한 정부당국과 미국정부는 남아 있는 모든 학살관련 기록을 흔연히 공개하고, 인권말살의 역사적 범죄를 낳은 정치적·군사적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무명의 망자들을 위한 진혼의 국가의례를 적극 추진하고, 후세를 위해서는 불행한 과거사의 '반면교훈비'(counter-monument)를 하나씩 세워가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업을 진심어린 자세로 착실히 수행해갈 때만 그동안 맺힌 설움과 원한과 증오의 올들이 하나씩 풀리고 펴지며 삭혀질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평화정착과 인권개화의 지반을 다져가는 최소한의 전제조건과 새로운 출발점이 될 법하지 않은가.●